

16대 대선: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는가?

김주찬* · 윤성이**

1. 서론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많은 언론들은 대선이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 하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진보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곧 보수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던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 신문은 16대 대선은 큰 변화였고 혁명이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보수가 탄탄한 주류를 형성해온 우리 사회에서 ‘개혁’과 ‘진보’ 물결의 위력을 보여 주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는 정책의 성패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저울추처럼 번갈아 우위를 점하는 보-혁 균형구도로 발전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일보 2002년 12월 24일). 이러한 분석은 외관상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적어도 선거 기간 내내 신문과 방송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술하게 접할 수 있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를 지정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여론조사도 빈번하게 실시되었다. 과연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우리들이 사용해 왔던 ‘진보’와 ‘보수’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었는가? 또한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지지후보를 결정하였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지난 대선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듯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는 통념적으로, “인간 존재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은 과학과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며, 행복과 복지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반화된다(홍윤기, 2002: 41). 또한 진보는 역사의 객관적인 발전을 의미하며, 그런 한 진보주의는 역사적 발전을 요구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진보는 한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사회적 운동의 목표라고 규정될 수 있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보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반대어는 퇴보이다. 진보와 퇴보는 역사의 객관적 발전과 후퇴를 의미하며, 그런 한 그것은 행위자들이 가지는 이념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사태의 진전 자체

*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원식 2002, 55-56). 한편 역사 발전의 방식과 경로를 둘러싸고, 기존의 질서를 고수(보수)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질서를 혁신(혹은 개혁)하려는 입장이 존재하며 이를 각각 보수주의와 혁신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즉 보수주의는 해당 시기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고수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혁신주의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개혁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김원식, 2002: 56). 만일 보수주의를 역사적인 진보와는 무관하게 지배 계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만 정의한다면, 보수와 혁신의 합리적인 논쟁 구도는 마련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그 입장 자체를 타파해야 할 특권 세력을 대변하는 수구 반동의 논리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는 보수주의와 혁신주의 모두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라고 보아야 한다. 역사적 퇴보를 가져오는 태도는 왜곡된 보수주의인 수구 반동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혁신주의(혹은 모험주의)로 구별될 수 있다(김원식, 2002: 57-58).

이와 같은 '진보'와 '보수'의 본래적 의미를 놓고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간의 대결은 사실상 '진보'를 향한 '보수'와 '개혁' 간의 경쟁이 되었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수구 반동' 대 '급진 좌파'의 대결로 나타났다. 양 집단이 다 스스로는 보수주의자이고 개혁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구주의자이고 급진주의자로 공격하여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독재'와 '민주'의 투쟁 상황에서는 단일한 정치적 문제 자체가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며, 사회는 권위주의 세력과 저항 세력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정치적 대립이 다원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노동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동성애 문제, 통일 문제 등으로 다양해지면, 한 가지 확실적 기준에 따라 보수주의와 혁신주의의 전선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혁신주의자들도 여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에 얼마든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에서 혁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라도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얼마든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이 우리 사회의 객관적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김원식 2002 58-59).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구체적 정책의 내용과 그 실천방안을 둘러싼 후보자간의 토론과 경쟁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추상적인 거대담론이 주를 이루었고 지지 집단도 이에 따라 양분화 되었다. 실질적인 '보수'와 '개혁' 사이의 경쟁은 양측이 모두 민주화된 정치 및 문화 맥락 안에서 정치적 성숙을 기할 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담론적 실천'을 통해 대중의 의사를 결집시킬 문화적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홍윤기 2002, 26).

지난 대선을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었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는 대통령 선거 후 실시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설문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지지자 사이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지지자의 77.5%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규정한 반면 이회창 지지자는 22.5%만이 자신이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선거기간 중 두 후보간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대북 지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에서도 두 후보 지지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이슈이면서도 두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치 않았던 기여 입학제도, 환경보전과 개발의 문제 그리고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 문제 등에 있어서는 두 후보 지지자간의 입장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는 노무현 후보를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해석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지지후보에 따라 결정되는 성향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정상적 투표 행태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이 먼저 형성되고 이것에 의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게 되나, 지난 대선에서는 거꾸로 지지후보가 먼저 결정된 후 자신들의 정책적 태도가 후보의 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갑윤(2002)은 출신지역과 정치적 정향, 그리고 정당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개인의 정치적 정향이 지지정당의 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반면 지지정당의 입장에 따라 개인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과 지역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당호감도에는 지역변수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 나타나는 정향과 태도의 차이는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제 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연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지난 16대 대선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주관적 이념성향과 투표행태

이념성향에 따른 투표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응답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개인의 이념성향과 선택한 후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인 스스로 진보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8%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고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는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 64%에 달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를 중도적이라고 평가하는 계층에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가 6: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한 지지비율 자료의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무현 후보의 지지계층에서는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계층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반면 (53.3%) 이회창의 지지계층 중에서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지지계층은 2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서 본인 스스로 보수적이라 평가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16.9%에 불과한 반면 이회창 지지자중 44.2%는 본인 스스로가 보수적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상당한 부분 이념적 선호에 의한 투표,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1> 이념성향과 투표대상의 교차표 (단위: 명)

구분		투표대상		전체
		이회창	노무현	
이념 성향	진보	115 (22.5%)	395 (77.5%)	510 (100.0%)
	중도	169 (43.3%)	221 (56.7%)	390 (100.0%)
	보수	225 (64.3%)	125 (35.7%)	350 (100.0%)
전체		509 (40.7%)	741 (59.3%)	1250 (100.0%)
$\chi^2 = 151.386$ $df = 2$ $p = .000$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보수나 진보나를 응답자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서 실제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가치관이나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진보적이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의 사회과학적 의미와는 무관한 저널리시틱한 이미지, 특히 보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수구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진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급진적, 좌파적 이미지 때문에 개인의 이념성향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인의 이념 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례로, 대선 직후 실시된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와 지난 2003년 4월 말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대선 직후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국민이 40%에 달했던 반면 4월의 조사에서는 27.2%만이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라 생각하고 있어 그 비율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도’의 비율도 31.2%에서 26.3%로 줄고 ‘보수’는 28%에서 46.5%로 크게 늘어 주관적 이념평가가 사회 구성원의 이념 성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

을 수 없다. 다만 이념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특정 후보의 지지 계층에서 본인을 보수라고 응답하고 있는 유권자와 진보 혹은 중도라고 응답하고 있는 유권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의 분석이외엔 별다른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보수=이회창 후보, 진보=노무현 후보라는 전제 하에 선거전이 진행됨으로써 본인의 실제적인 이념성향과는 관계없이 이회창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스스로를 보수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스스로를 진보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 이념성향에 대한 평가와 지지후보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후보자 선택의 문제를 분석하는 경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III. 정책에 대한 태도와 투표행태

주관적 이념성향 평가가 지니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인 정책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¹⁾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하여 활용된 여덟 개의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각각의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적으로 찬성, 약간찬성, 약간반대, 절대반대로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 답변은 분석에서 결측처리 하였다.

-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
-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미국과의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
-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우선이다.

1) 설문조사에서 진보·보수 성향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지표로 만들어 사용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이갑윤, 2002). 우리 국민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연구로는 한국조사연구학회와 조선일보, 그리고 갤럽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이념성향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와는 다른, 보다 정교한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2>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 요인분석

구분	성분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786	.153	-.122	.656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728	.133	-.106	.556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 개정이 필요하다	.696	.094	.105	.315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	.082	.628	.056	.628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42	.628	.008	.527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131	.170	.628	.517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	.277	-.321	.628	.642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422	-.019	.628	.392
고유값(Eigen Value)	2.045	1.120	1.068	
분산설명비율	25.559	14.004	13.355	
분산의 누적비율	25.559	39.564	52.919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첫째,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와 SOFA 개정 등의 이슈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요인1). 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태도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요인2). 셋째, 개발과 환경보존, 기여입학제도, 시장과 정부의 관계등에 대한 질문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요인3).

위의 설문 문항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분명하게 들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설문 문항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 것이 보수이고 어떻게 답하는 것이 진보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과 정부 중 시장을 중시하면 보수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면 진보로, 평등과 효율 중 평등을 보다 중시하면 진보로, 효율을 보다 중시하면 보수로 구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개입 필요성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각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진보성향(1점) 대체로 진보(2점) 대체로 보수(3점) 보수성향(4점)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1-4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각각의 개별항목을 합산, 각 요인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평균값이 1.0에서 2.0사이에 해당되면 진보, 2.1에서 2.9까지는 중도, 3.0에서 4.0까지는 보수로 분류하였다.

만약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요인이 후보 선택의 주요기준중의 하나였다고 한다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류된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선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 요인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이념 성향과 후보 선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 1과 요인 2에서의 이념 성향과 후보자 선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나 요인3에서는 이념성향과 후보자 선택간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인 1과 요인 2에 있어서도 요인2에서의 관련성이 요인1의 경우보다 더욱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요인과 투표대상 교차표 (단위: 명)

구분		투표대상		전체
		이회창	노무현	
요인1	진보	282 (35.7%)	509 (64.3%)	791 (100.0%)
	중도	125 (51.2%)	119 (48.8%)	244 (100.0%)
	보수	45 (64.3%)	25 (35.7%)	70 (100.0%)
전체		452 (40.9%)	653 (59.1%)	1105 (100.0%)
$\chi^2 = 35.623$ $df = 2$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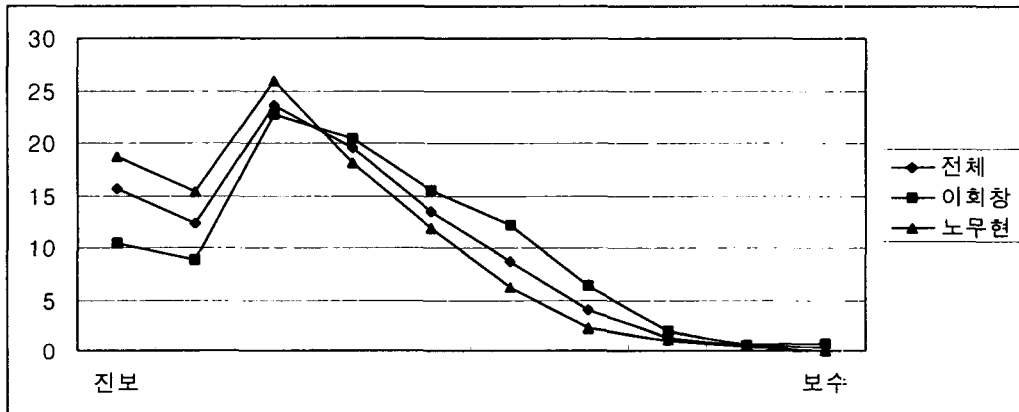
구분		투표대상		전체
		이회창	노무현	
요인2	진보	97 (21.5%)	355 (78.5%)	452 (100.0%)
	중도	119 (41.2%)	170 (58.8%)	289 (100.0%)
	보수	219 (66.0%)	113 (34.0%)	332 (100.0%)
전체		435 (40.5%)	638 (59.5%)	1073 (100.0%)
$\chi^2 = 157.335$ $df = 2$ $p = .000$				

구분		투표대상		전체
		이회창	노무현	
요인3	진보	223 (39.3%)	344 (60.7%)	567 (100.0%)
	중도	161 (42.0%)	222 (58.0%)	383 (100.0%)
	보수	37 (44.6%)	46 (55.4%)	83 (100.0%)
전체		421 (40.8%)	612 (59.2%)	1033 (100.0%)
$\chi^2 = 1.240$ $df = 2$ $p = .538$				

우선 요인 2의 경우 진보적 유권자들은 78.5%가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반면 이회창 후보에 투표한 진보적 유권자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의 경우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가 66.0%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가 34.0%로 조사되어 이념 성향에 의한 후보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가 6:4 정도로 나타나 이 조사 전체의 두 후보에 대한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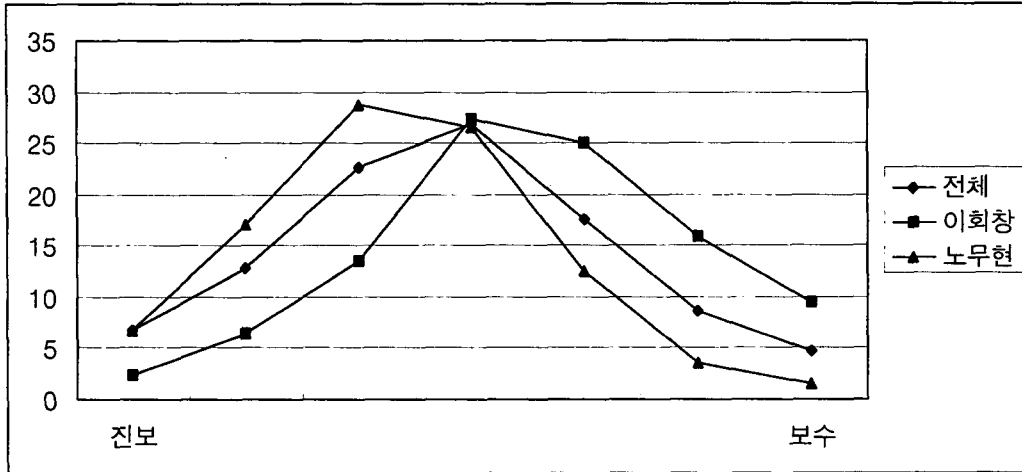
을 비와 동일하다.) 요인 1의 경우에도 진보적 유권자의 경우 64.3%는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였고 보수적 유권자는 35.7%만이 노무현 후보를 선택해 요인 2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념성향에 따라 후보 선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 1의 경우 중도적 유권자의 51.2%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그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요인 3의 경우 진보적 유권자와 보수적 유권자의 노무현 후보 지지는 각각 60.7%와 55.4%로 조사되고 중도적 유권자의 경우 58.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요인 3의 이념성향에 따른 후보 선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1> 요인1에 의한 유권자의 이념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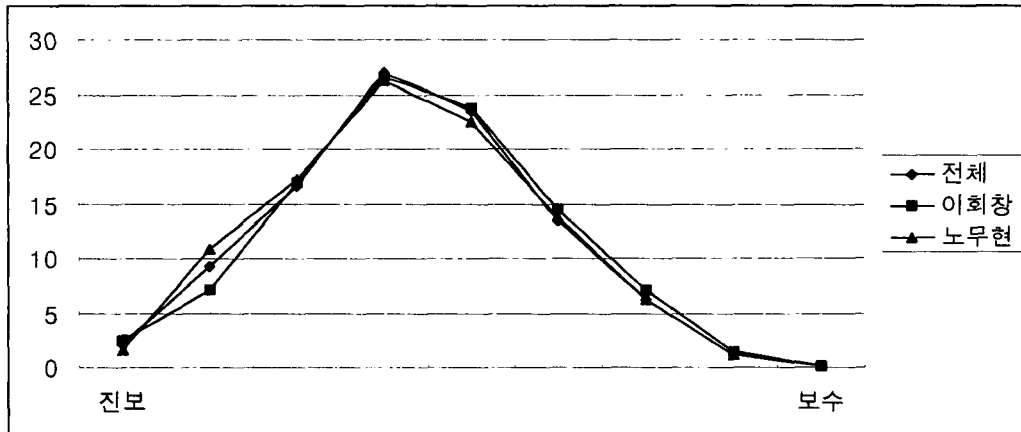


2) 지난 16대 대선의 실제 득표율은 노무현 당선자 48.9%, 이회창 후보 46.6%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노무현 후보 지지자의 견해가 실제보다 과다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 요인2에 의한 유권자의 이념분포



<그림 3> 요인3에 의한 유권자의 이념분포



위의 그래프는 노무현 지지자와 이회창 지지자의 이념 성향에 따른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요인1의 경우를 보면 노무현 지지자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중도나 보수적 유권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요인 2의 경우는 이회창 지지자들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노무현 지지자의 경우 진보적 성향이 높은 것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요인 3의 경우 두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 사이에 이념 성향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IV. ‘보수’ 대 ‘진보’의 대결에 대한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도 이념성향과 후보자 선택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선택은 요인 1,2,3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우선 여러 정책 문제들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 이유를 규명하여 보았다.

세 가지 성분으로 분류된 각각의 정책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기된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것들(요인2)과 상대적으로 입장차이가 작은 이슈들(요인1), 그리고 입장차이가 없거나 유권자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요인3)들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DJ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와 DJ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퍼주기”논쟁을 유도하며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주장한 이회창 후보의 대북한 정책은 유권자의 입장에선 실제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북관(對北觀)의 연장에서 같은 사고를 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둘째, 두 후보간 공약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두 후보의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의 문제나 SOFA 개정의 문제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의 할당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회창 후보는 지역구 30%, 고위임명직 여성비율 30%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한국일보, 2002.11.18 8면), 여성할당제의 경우 노무현 후보가 임용할당제뿐만 아니라 여성고급인력 양성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실현가능성과 정책의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과 차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문화일보, 2002.10.31, 5면).

마지막으로 요인3의 경우는 선거기간 중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차이에 대해서도 일반 유권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상의 분류에 적합하다고 보여 진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 평등과 효율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유권자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각의 설문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그 이슈가 얼마나 정치화되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후보자들 간의 정책차이가 분명한 이슈

(요인 2), 후보자들의 정책차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존재하는 경우 (요인 1)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하여 후보자들 간의 정책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요인 3)로 구분이 되었으며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성향은 요인3에 의해 구분될 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나 양 지지계층사이에 요인3에 의한 이념 성향의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념성향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지난 4월말의 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치분야의 이념성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 지지층 사이에 경제분야나 사회분야의 이념 성향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3.5.5. A5면).

지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의 결정요인으로서 출신 지역이 거론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신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념성향에 의한 투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이러한 검증을 위하여 지난 대선에서 지역 요인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된 바 있었던 호남과 영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념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출신 지역과 이념성향 (단위: 명)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이념성향			전체	이념성향			전체	이념성향			전체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지역	비영 호남	452 70.0%	148 22.9%	46 7.1%	646 100.0%	250 40.3%	167 26.9%	203 32.7%	620 100.0%	322 53.3%	233 38.6%	49 8.1%	604 100.0%
	호남	174 74.4%	48 20.5%	12 5.1%	234 100.0%	135 58.7%	56 24.3%	39 17.0%	230 100.0%	130 59.9%	73 33.6%	14 6.5%	217 100.0%
	영남	321 71.3%	100 22.2%	29 6.4%	450 100.0%	158 36.8%	114 26.6%	157 36.6%	429 100.0%	235 55.4%	155 36.6%	34 8.0%	424 100.0%
전체	947 71.2%	296 22.3%	87 6.5%	1330 100.0%	543 42.5%	337 26.3%	399 31.2%	1279 100.0%	687 55.2%	461 37.0%	97 7.8%	1245 100.0%	
χ^2, df, p	$\chi^2=1.963, df=4, p=.743$				$\chi^2=38.024, df=4, p=.000$				$\chi^2=2.963, df=4, p=.564$				

즉 요인2의 경우에만 출신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 호남지역을 고향으로 둔 유권자의 경우 진보와 보수가 각각 58.7%와 17.0%로 나타난 반면 영남 출신 유권자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가 36.8%와 36.6%로 양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요인1와 요인3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에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그 의식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입장 차이가 적은 이슈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에 따른 이념성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지난 선거의 주요 후보 선택요인인 출신지역을 통제하고 각 출신 지역별 이념성향에 따른 후보 결정을 분석하여 보면 영남출신의 경우 요인2에 대한 진보 계층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출신 유권자의 경우 요인

<표 5> 지역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요인 1,2,3에 의한 후보자 선택 (단위: 명)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투표대상		전체	투표대상		전체	투표대상		전체	
	이희창	노무현		이희창	노무현		이희창	노무현		
비영 호남	진보	125	240	365	49	151	200	108	150	258
		34.2%	65.8%	100.0%	24.5%	75.5%	100.0%	41.9%	58.1%	100.0%
	중도	66	58	124	53	92	145	76	116	192
		53.2%	46.8%	100.0%	36.6%	63.4%	100.0%	39.6%	60.4%	100.0%
	보수	23	12	35	108	54	162	19	22	41
	65.7%	34.3%	100.0%	66.7%	33.3%	100.0%	46.3%	53.7%	100.0%	
전체	214	310	524	210	297	507	203	288	491	
	40.8%	59.2%	100.0%	41.4%	58.6%	100.0%	41.3%	58.7%	100.0%	
χ^2, df, p	$\chi^2=23.404 df=2 p=.000$			$\chi^2=67.570 df=2 p=.000$			$\chi^2=.696 df=2 p=.706$			
호남	진보	8	151	159	4	121	125	6	114	120
		5.0%	95.0%	100.0%	3.2%	96.8%	100.0%	5.0%	95.0%	100.0%
	중도	2	39	41	5	43	48	3	63	66
		4.9%	95.1%	100.0%	10.4%	89.6%	100.0%	4.5%	95.5%	100.0%
	보수	1	9	10	2	33	35		13	13
	10.0%	90.0%	100.0%	5.7%	94.3%	100.0%		100.0%	100.0%	
전체	11	199	210	11	197	208	9	190	199	
	5.2%	94.8%	100.0%	5.3%	94.7%	100.0%	4.5%	95.5%	100.0%	
χ^2, df, p	$\chi^2=.481 df=2 p=.786$			$\chi^2=3.621 df=2 p=.164$			$\chi^2=.679 df=2 p=.712$			
영남	진보	149	115	264	44	80	124	109	77	186
		56.4%	43.6%	100.0%	35.5%	64.5%	100.0%	58.6%	41.4%	100.0%
	중도	57	22	79	60	35	95	82	43	125
		72.2%	27.8%	100.0%	63.2%	36.8%	100.0%	65.6%	34.4%	100.0%
	보수	20	4	24	108	26	134	18	11	29
	83.3%	16.7%	100.0%	80.6%	19.4%	100.0%	62.1%	37.9%	100.0%	
전체	226	141	367	212	141	353	209	131	340	
	61.6%	38.4%	100.0%	60.1%	39.9%	100.0%	61.5%	38.5%	100.0%	
χ^2, df, p	$\chi^2=11.481 df=2 p=.003$			$\chi^2=55.161 df=2 p=.000$			$\chi^2=.551 df=2 p=.461$			

1,2,3의 모두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인3의 경우 각 출신 지역별로 이념성향의 차이에 따른 후보선택의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요인1과 요인2의 경우 영남 출신에서는 이념성향에 따른 후보선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호남출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이념성향과 출신지역의 교차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상 지역출신 유권자의 경우 28.7%가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라 지역 출신 유권자의 경우 22.3%만이 자신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자신을 진보로 분류하는 유권자는 경상 출신의 경우 33.5%였으며 전라 출신은 51.1%가 스스로를 진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지역 출신의 유권자들이 본인의 이념 성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그간 호남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성

향의 후보자들을 지지함으로써 이념 성향 자체가 진보화 되었다는 이른바 지지후보(또는 정당)의 설득효과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성향이나 정책성향을 후보자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수도 건설공약이 지지후보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중의 하나라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특히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노무현 지지자의 경우 행정수도 건설을 가장 중요한 지지후보 결정요인이라 응답하고 있다.³⁾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 공약의 성격을 묻는 또 다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실현성없는 급조된 공약이라 응답하였으며 실현성있는 공약이라 평가한 응답자는 36.4%에 그쳤다. 노무현 지지자의 경우에도 34.2%는 선거용으로 급조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 응답하고 있어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이 사실상 지지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 노무현 지지자의 1/3 이상이 충청권 이전 공약에 대해 급조된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으로 응답하였다는 사실은 <표 6>에서 나타난 대로 이 공약이 노무현 후보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후보지지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단위: 명)

구분	투표대상		전체
	이회창	노무현	
북한 핵시설 재개	91 (17.9%)	58 (7.8%)	149 (11.9%)
행정수도 충청이전	74 (14.5%)	173 (23.3%)	247 (19.8%)
국정원 도청	26 (5.1%)	11 (1.5%)	37 (3.0%)
노무현/정몽준 선거공조	78 (15.3%)	170 (22.9%)	248 (19.8%)
미군장갑차 여중생 추모시위	25 (4.9%)	59 (8.0%)	84 (6.7%)
북한 미사일 수출	15 (2.9%)	6 (0.8%)	21 (1.7%)
철새 정치인 영입	11 (2.2%)	44 (5.9%)	55 (4.4%)
기타	182 (35.8%)	185 (25.0%)	367 (29.4%)
무응답	7 (1.4%)	35 (4.7%)	42 (3.4%)
전체	509 (100.0%)	741 (100.0%)	1250 (100.0%)

- 3) 여론조사 기관인 오픈 소사이어티에서 선거 전날 (12월 18일) 전국의 유권자 1,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2%가 수도 이전 공방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 4) 오픈 소사이어티의 조사에서 48%의 응답자는 수도 이전공약에 찬성, 45.5%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충청지역 유권자의 경우는 40.3%가 찬성, 51.2%가 반대로 조사되었으며 호남지역 유권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76.6%, 11.8%로 조사되었고 노무현 후보지지 계층에서는 찬성이 78.1%로 조사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2.70%)

V. 결론

많은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서 지난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었다. 이러한 대결 구도의 형성은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진보'를 상징하는 노무현 후보는 '새 정치'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보수'의 꼬리표를 단 이회창 후보는 '낡은 정치' 그리고 '수구와 기득권 보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은 이미 특정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의 발전과 개선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원식, 2002: 51). 진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는 용어는 의미상 바로 진보에 반대되는 '퇴보' 또는 '역행'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의 관념을 의식적으로 가동하여 형상화시키는 정치 운동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 반대의 방향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사실상 언어 싸움에서 한 수 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다(홍윤식, 2002: 24).

많은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지난 선거가 이념선거이고 정책선거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성향과 투표행태간의 관계를 요인분석 한 결과 지난 선거를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권자의 정책적, 이념적 입장을 측정할 수 있는 이슈를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을 때 지지후보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이슈들(요인2)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의 태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후보자들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요인3)을 놓고 볼 때는 진보적 유권자가 노무현 후보를 그리고 보수적 유권자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개인의 본래적 이념 성향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지지후보의 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이 지닌 보수적 혹은 개혁적 성향보다도 지지후보의 성향에 의해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투표행태는 정치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지역주의'가 선거전략의 한 방편으로 왜곡되고 호도 되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념대결'이 각 후보진영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 과거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적 이분화에 이어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이분화가 선거에서 하나의 전선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 이념 경쟁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 의해 선거전략으로 형성되는 분열구도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념대립의 양상이 다른 사상과 정책을 선호하는 집단 간의 건전한 경쟁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치달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

참고문헌

- 김원식. 2002.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 진보-보수 논쟁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제언.” 사회와 철학연구회. 『진보와 보수』. 이학사.
-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18(2).
- 홍윤기. 2002.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보수-관계’의 작동과 그 한국적 상황: ‘진보-보수-담론’의 성립 조건에서 본 한국 정치문화의 부실성.” 사회와 철학연구회. 『진보와 보수』. 이학사.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